

2021 정부 업무보고
「회복·포용·도약 대한민국 2021」
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, 지식재산으로 앞당긴다

< 2021년 핵심 추진과제 >

- ▶ AI 창작물·데이터 보호 등 디지털 신기술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제도 정비
- ▶ 특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... 전세계 동향 파악해 기술개발·사업전략 수립 지원
- ▶ IP투자펀드 조성(500억원), 분쟁대응 원스톱 지원(지재권 분쟁 대응센터) 등 혁신기업 성장 뒷받침도

< 4년간 정책성과와 '21년 업무계획 관련 국민체감 사례 >

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(특허)만으로 자금 조달 가능

TV 셋톱박스 제조업체 A사는 해외 바이어의 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구입 자금이 부족해 발만 구르고 있었다. 기업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데다 부동산 등 담보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IP담보대출을 시작한 B은행에서 특허를 담보로 낮은 금리로 사업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차질없이 해외 납품을 진행할 수 있었다. IP금융 규모가 지난 4년간 약 3.5배 성장하면서 ('16. 5,774억원 → '20. 20,486억원),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확실한 통로로 자리매김한 결과다. (IP담보대출 기업의 88%가 신용등급 BB 이하 비우량기업)

누구나 쉽게 지식재산 데이터를 분석·활용하는 시대

연구소기업 C사는 종전 수 주 이상 소요되던 글로벌 기술·시장 분석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, 정확도 높은 R&D 및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각종 산업·경제·특허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DB화되고, 다양한 기준으로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'특허 빅데이터 플랫폼'이 곧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. C사는 "전문가 경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,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"이라면 기대감을 나타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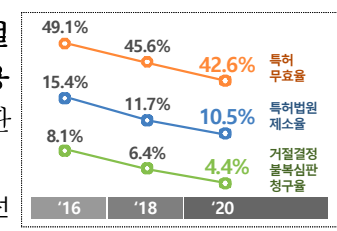
-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3월 11일(목), 디지털 경제에 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하고, 혁신기업 성장을 통해 글로벌 기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'2021년도 업무계획'을 발표했다.
 -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 지식재산분야 정책성과를 점검하고,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·기업·산업관점의 계획을 담고 있다.

I. 4년간 추진성과 및 평가

지식재산을 통해 日 수출규제, 코로나19 등 위기극복을 지원하고, 지식재산을 혁신성장으로 연결하는 '지식재산 혁신 생태계'의 기틀을 조성

- 1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위기극복 지원
- 日 수출규제에 대응하여, 소부장 핵심품목 R&D(506개)에 특허관점 R&D전략(IP-R&D) 지원, 원스톱 분쟁지원 등 기술 국산화를 돕고,
 - 코로나 백신·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특허DB(671건)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했다.

- 2 심사의 정확성·신뢰성을 위한 심사 시스템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
-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담심사조직 신설 ('19), 심사품질 관리방향 전환*, AI 활용 심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심사·심판 품질을 높이는 한편,
 - * 흠결·오류 방지 → 소통·협의를 통한 품질 개선
 - 한-미, 한-일 특허공동심사 실시, 아세안 국가 대상 특허인정협약* 확산 등 국제심사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.
 - *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해외에서 무심사 등록(캄보디아, 라오스, 브루나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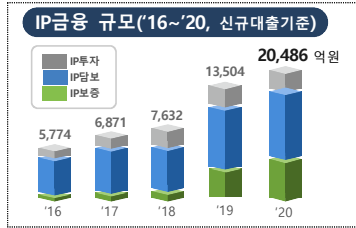


- 3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지식재산 활용 본격화
- 핵심산업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('19~'20, 10개 분야)하여 R&D로 연계*하고, 소부장 R&D에 특허관점 R&D전략(IP-R&D) 수립을 제도화하여 국가 R&D에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다.
 - * '19년 차세대전지 등 5개 산업, 75개 유망기술 도출 → '20년 부처 R&D과제 반영(100개)

-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*, 담보IP 회수지원기구 출범(20.2)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

IP금융도 2조원대로 급성장하였다.

* (~'18) 산업기업 → ('20) 5대 시중은행(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농협) 및 지방은행(부산)



4 지식재산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

-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벌 상향('18), 지재권 고의침해 시 3배 배상 도입,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*('20) 등 민·형사 책임을 높이고, * (중진) 특허권자 생산능력 한도로 배상 → (개선) 침해자 판매량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
- 부정경쟁행위 조사·시정권고 실시('17), 특허·영업비밀·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출범('19) 등 침해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했다
-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*하고, 한류편승기업,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K-브랜드 침해 대응**을 강화하여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. *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(판매글 차단, 사이트 폐쇄 등): ('16) 6천건 → ('20) 14.6만건 ** 한류편승기업의 국내법인 해산, 브로커 선점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지원 등

II. 2021년 핵심 정책방향

-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4개 전략, 10개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.

【 전략 및 대책 】

지식재산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	
전략 1 親디지털 지식재산제도 구축 1 지식재산을 통한 디지털 신기술 보호 2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심사·심판 개선 3 디지털 통상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	전략 2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 1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산업전략 수립 지원 2 지식재산 데이터 분석·개방 확대
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	
전략 3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 성장 지원 1 지식재산을 활용한 혁신창업·스케일업 지원 2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3 창의적 지식재산 인재 육성	전략 4 지식재산 보호·집행 강화 1 지식재산 보호법제 개선 2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철저한 감시·집행

III. 2021년 주요 업무계획

1 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

- (신기술 보호) AI 창작물,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.
 - (AI) 전문가·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AI 창작행위 관련 이슈(발명자·창작자 인정, 소유권 등)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.
 - (데이터 등) 데이터 부정취득·사용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구체화하고,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
 - (新침해유형) 디지털 상품(전자책, 앱 등)의 온라인 전송, 가상현실에서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한다.
- (심사·심판) 디지털, 융복합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적시에 심사·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.

- (특허) AI, 자율주행 등 디지털·융복합 산업(5개) 심사가이드 마련, 디지털 융복합기술 기반 서비스·제품군으로 일괄심사* 대상 확대 * 하나의 제품 관련 특허·상표·디자인 등의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 가능한 제도
- (상표) 색채, 홀로그램 등 비전형상표 유형별 심사가이드 마련
- (디자인) 온라인으로 모방이 쉬운 제품*을 일부심사 대상에 포함 * ('20) 의류, 사무용품 등 3개 분류 → ('21) 식품, 포장용기 등 7개 분류로 확대
- (심판) 디지털·융복합기술 분야 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
- (시스템) AI 특허·디자인검색, 기계번역 등 심사시스템 고도화

- (통상)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, 주요 통상협정(USMCA, CPTPP 등) 내용을 토대로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수립하고,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지식재산 국제규범을 주도한다.

2 R&D 및 산업활동 전반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

- (국가R&D) R&D 중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, 대형 R&D사업단에 IP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한다.

- (R&D) 디지털, 탄소중립 등 국가 핵심정책·산업을 중심으로 (R&D 기획) **특허 빅데이터 분석***, (R&D수행) **IP-R&D 지원(526개)**을 강화하고,
 - * ('21) 7개 분야 → (~'24) 총 35개 분야, 분석 결과는 국가R&D사업 과제로 반영
- (표준) 차세대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6G 등 **표준특허 전략맵** 구축, 5G 분야 **표준특허 필수성*** 검증 등 **표준화 지원도 병행**한다.
 - * 기업이 표준특허라고 선언한 특허(선언 표준특허)의 표준규격 부합 여부 검증
- (민간 산업활동)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 연계*, 상표·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**사업전략 제공** 등을 통해 **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**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.
 - * (예) 특허정보(실험데이터)를 소재DB와 연계, AI기반 신소재연구용 산업데이터 생성
- (인프라) 이를 위해 산업·경제·특허 데이터를 연계·분석할 수 있는 **'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'**을 구축하여 개방한다.

③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 확대

- (스케일업) 자금, 기술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**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**할 수 있도록, IP금융,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한다.
 - (IP금융)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**지방은행권으로 확대***하여 지방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, **IP투자펀드 신규 조성(500억원)**, **민간 IP투자상품 출시** 등을 통해 시장의 IP직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.
 - * IP담보대출 취급은행: ('20) 국책(2)·시중(5)·지방(1)은행 → ('21) 지방은행(4) 추가
 - (IP거래) 민간 거래기관을 **컨설팅 기반 전문기관으로 육성(12개)**하고, **대학·공공연 및 국유특허 활용을 막는 규제도 대폭 완화***한다.
 - * 대학·공공연 포기특허의 발명자 양도 허용, 국유특허 사용계약 제한 완화(최대 5년 1회만 갱신 가능 → 반복 갱신 허용) 등
 - (세제) 아울러, 특허출원·등록, 기술취득비용 등에 대한 **세제혜택 확대**를 추진하고,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**특허박스(Patent Box)제도 도입**을 함께 검토한다.


- (해외 진출)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, 지재권 분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, 해외 상표브로커·위조상품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.
 - (권리획득) IP출원펀드를 신규 조성(60억원)하는 등 글로벌 경쟁에 필수적인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한다.(3,500건, '17~'20 연간 약 2,600건)
 - (분쟁지원) '지재권분쟁 대응센터'를 통해 **해외분쟁동향을 수시 모니터링**하고 분쟁 발생 시 **원스톱 지원**하는 한편, 러시아·멕시코 **IP-DESK**를 신설(총 11개국 17개소)하여 해외 지원거점도 늘린다.
 - (K-브랜드) 해외 **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확대***하고, **경찰청·인터폴·신남북방 단속기관과 합동단속** 등 공조를 강화한다.
 - * 모니터링 국가: (상표 무단선점) ('20) 중국, 베트남, 태국 → ('21) 인도네시아 추가 (위조상품) ('20) 중국, 아세안 6개국, 대만 → ('21) 인도 추가
- (전문인력) 이와 함께 **권역별 IP중점대학***을 지정하여 IP빅데이터, IP금융 등 **新 IP수요에 특화된 현장 전문인력**을 집중 육성한다.
 - * 교육부 지역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('21) 3개 대학 → ('25) 10개 대학

④ 공정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보호·집행 강화

- (법·제도) 영업비밀·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**법적 책임**을 강화하고, **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**을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.

- (영업비밀 침해) **계획적인 인력 빼가기** 등에 대한 **법인 가중 처벌**, **침해이익 몰수** 등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**벌칙 강화**
 - (아이디어 탈취)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**시정 명령·시정명령위반죄 도입 추진** (현재는 시정권고만 가능)
 - (한국형 증거수집제도) **업종별 협·단체, 법조계 등과 폭넓게 소통·협의**하고, **기업 의견을 토대로 제도 도입방안 모색**
- (조사·수사) 기술탈취·침해 대응 **전담체계** 구축, **디지털 포렌식 인력·장비 확충** 등을 통해 **수사역량을 강화**하고,

- **중요 사건***은 선제적으로 수사·조사하여 조기 해결을 도모한다.
- * 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, 국민 건강·안전 관련 및 아이디어 탈취 사건 등
- **(위조상품)** 증가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*을 차단하기 위해,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**모니터링단을 통한 단속을 강화**하는 한편,
 - *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 : ('19) 6,661건→ ('20) 16,693건 (150% 증가)
-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**온라인사업자 책임을 강화**하고, 일부 온라인 사업자가 도입한 **소비자 先보상제***를 **업계 전반으로 확산**한다.
 - * 온라인사업자가 위조상품 구매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먼저 보상하고, 이후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(현재 11번가, G마켓 등에서 제한적으로 도입)
- **김용선 특허청 차장**은 “**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**”이라면서,
 - “올 한해,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**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**”하는 한편, “**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**를 강화해, **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기여**”하겠다고 강조했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구자욱 사무관(☎ 042-481-50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